

##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재검토: 전쟁인류학의 모색\*

진필수\*\*

본고는 1930년대 이후 일제가 구축했던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을 재검토하면서 한국에서 전쟁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어떠한 관점과 주제를 채택할 수 있는지 논의한 것이다. 일제의 총동원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났던 서구제국들의 총력전 양상을 분석한 후 서구 모델과 비교하면서 만들어진 전쟁의 사회체제였다. 일제의 군부와 정부 당국은 물질 자원과 경제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미성숙한 애국심(시민적 자발성이 부족한)을 보완하기 위해 총후의 재조직과 사상동원에 일찍부터 힘을 쏟았다. 관계 운동을 통해 구축된 직능별·지역별 국민조직은 일본판 전체주의의 성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지역별 조직의 말단인 정내회·부락회의 재편과 전쟁 협력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사상동원에 있어서는 황도주의, 국체론, 일본정신론과 같은 독특한 국가주의가 위세를 떨쳤는데, 무사도와 같이 전쟁의 맥락에서 발명된 혹은 각색된 문화들에서 동원의 논리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체제, 문화, 학문형성에서 동원의 경험은 불가역적인 것이며, 모방, 이식, 지속, 굴절, 부활과 같은 개념을 통해 다양한 전후사에 남겨진 동원의 문화를 검토하는 것이 전쟁인류학의 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주요개념>: 총력전, 총동원체제, 전쟁인류학, 일본정신, 무사도

\* 본 논문은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62-G00006).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 1. 문제제기

그동안 한국에서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관한 연구는 징용, 강제연행, 강제 동원에 따른 식민지 조선 민중의 피해를 파악하는 데 집중된 경향이 있다(朴慶植 1965; 정혜경 2004, 2013 등). 2004년 3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피해에관한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강제동원 관련 국내 연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한국, 일본, 과거 일제 식민지에 산재해 있던 강제동원 명부가 상당수 수집·정리되었고(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피해에관한진상규명위원회 2009; 정혜경·심재욱·오일환·김명환·北原道子·김난영 2011; 정혜경·김명환·今泉裕美子·방일권·심재욱·조진 201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3), 강제동원 경험자들의 구술자료도 문헌으로 발간되어 관련 연구를 위한 자료적 기반이 활발하게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심층적 분석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14년 6월~11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된, 과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의 구성적 특질을 규명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군사 분야의 문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진필수 2014). 이 과정에서 필자는 일제의 총력전(total war)과 총동원체제를 반일민족주의 일변도의 관점을 벗어나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일제의 총력전과 총동원체제는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의 양자적 관계를 넘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서구제국과 일본제국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일제의 총력전과 총동원체제는 일제의 독자적 발명품도 아니고, 파시즘이나 군국주의가 낳은 일탈적 전쟁수행 양상 및 사회체제도 아니다. 그것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서구제국의 전쟁수행 전략을 일제의 군부 및 정부 당국이 학습한 결과를 제2차 세계대전(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실천하

면서 부분적으로 창안한 것이다.

일본학계에서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미 본 연구의 관심과 관련 깊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小林英夫 2004; 纈纈厚 2010; 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등 참조).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 군부가 제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서구제국의 총력전 양상을 학습한 과정과 이후 일제의 정치경제 체제, 법률 및 각종 사회제도, 식민정책 등을 재편해 나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행되었던 일제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를 독일, 미국, 소련, 영국의 그것들과 비교하거나 관계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기존 논의들은 전쟁사, 군정사(軍政史), 경제사 등의 관심에서 주로 군부와 정계 지도층의 정책 구상 및 수립, 추진 과정을 분석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이 논의들은 일제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를 위로부터 혹은 핵심 추진주체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군사, 정치, 경제, 법률 분야의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이 초래한 사회체제의 재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도 일제 군부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총력전 및 동원체제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안재익 2013), 군부가 발행한 당대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 이후 일제가 구축했던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을 재검토하면서 한국에서 전쟁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어떠한 관점과 주제를 채택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 연구에는 인류학의 연구 관심에서 전문화하거나 심화시켜야 할 논의 주제들이 산적해 있고, 본고는 그것들을 점검하는 수준의 논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 중 군사 분야의 문헌들을 주요 자료로 하여)

---

1) 여기서 군사 분야의 문헌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구장서분류표(경성제국대학 장서분류표를 복간한 것)에서 군사의 범주로 분류된 문헌을 말한다. 군사 분야의 장서는 화한서(일본어나 한문으로 된 서적)가 5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화한서 잡지 16건, 서양서 136건, 서양서 잡지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한서 502건은 분류기호 9900-9990에 해당하는 장서로서 9900 군사(일반) 97건, 9910 전사 162건, 9920 병제·군비 74건, 9930 육군 20건, 해군 61건,

일제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를 당대의 맥락에서 재검토하는 데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일제 정책입안자들의 그것만이 아니라, 1930~40년대 일제의 학계, 지식계, 언론 및 대중사회에서 통용되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에 대한 지식체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1945년 이전에 발간된 이 자료들은 전쟁과 군사적 요인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사상, 종교 등 사회체제의 여러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얽혀서 변화해 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는 일제 권력자들의 독단적 횡포와 만행이라는 사실들을 고발하는 용어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일제 군부 및 정재계 지도층이 학습하고 실행한 전쟁수행 전략만을 지칭하는 용어도 아닌, 특정 목적과 양식의 전쟁이 낳은 하나의 사회체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적 사고에 입각할 때,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교사회론적 혹은 비교문화론적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전쟁수행을 위한, 또는 전쟁수행에 따른 사회체제의 재편이라는 연구 패러다임은 서구학계의 전쟁사 연구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총력전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Förster and Nagler 1997; Boemeke, Chickering, and Förster 1999; Chickering and Förster 2000, 2003; Marwick, Emsley, and Simpson 2001; Chickering, Förster, and Greiner 2005 등). 사실 총력전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전쟁 양식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어떻게 정의될

---

9950 고대병법 9건, 9960 병기·고대병기(부록 성곽) 57건, 9970 무예 15건, 9990 적십자 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한서 잡지 16건은 분류기호 Y99 軍事로 분류되어 있다. 서양서 136건은 분류기호 X000 Military & Naval Sciences 32건, X300 Military Science 27건, X500 Naval Science 73건, X700 Air Force 2건, X900 Red Cross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양서는 영어, 독어, 불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영어 문헌은 50건 정도이다. 서양서 잡지 7건은 분류기호 YX Military & Naval Sciences으로 분류되어 있고, 영어 문헌은 6건이다.

군사 분야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총력전체제 혹은 총동원체제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 논의가 1930년대 이후 일본제국 전체의 운영과 체제 개편, 그리고 학지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한 도서는 화한서 약 90~110건, 화한서 잡지 1건, 서양서 18건(영어 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군사 분야의 문헌이 아니더라도 본고의 논의에 관련된 일부 문헌들도 경성제국대학 장서에서 추출하였다.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지금도 분분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연구주제이다(Chickering and Förster 2003: 1-19). 서구 각국에서도 총력전이라는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래의 새로운 전쟁 양식(제2차 세계대전으로 현실화된)을 예견하는 용어로 탄생하여 대중화되었고, 그 의미를 일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사후적 과업이 되었다. 이 용어에서 “total”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total”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특정의 정치적 목표를 넘어 적의 섬멸을 추구하는 새로운(혹은 고대의 것이 부활되었다고 이야기되기도 하는)2) 전쟁 목적, 국제 규약의 인도주의적 제한을 넘어서는 전쟁의 방법과 수단, 전투가능한 최대 인원의 군사 동원(total mobilization), 국민의 완전한 통제(total control)와 전체적 조직화(total organization)를 위한 노력 등 “total”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총력전의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전장과 생활현장,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체제 혹은 국가체제의 모든 영역이 전쟁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된다는 점이다. 총력전이라는 개념만큼 전쟁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도 없다. 문제는 총력전의 대표적 예로 지칭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나타났던 서구 각국 총력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이었고, 사회체제 및 국가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일제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사회체제 및 문화의 변화를 논의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승전국의 역사인식이 지배하는 전후의 맥락에서 일제의 전쟁사를 다루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또한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간의

---

2) 말리노브스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적 상황을 목도하고 전쟁인류학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인류학이 원시전쟁, 식인풍습, 헤드 헌팅(head-hunting), 전쟁 의례 등의 일화를 알려주면서 사회과학의 광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가 제기한 전쟁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은 부족, 민족(nation), 국가(state)의 정치적·문화적 조건에서 발현되는 현대 전쟁의 양상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었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총력전이 인간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초래하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었다(Malinowski 1941).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논의는 일제 식민지의 일원으로 총력전을 처음 경험하고 희생당했던 근현대 한국인들의 전쟁경험을 한일관계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일제 국가총동원법의 체계와 당대의 쟁점

총력전이 전쟁수행의 양상에 강조점을 둔 용어라면, 총동원체제<sup>3)</sup>는 전쟁수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구축된 하나의 국가체제이자 사회체제이며 일종의 군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제국이 구축한 총동원체제의 개략과 구조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National Mobilization Law)을 통해 집대성되었다. 일제의 총동원체제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연구될 수 있지만, 총동원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야 그것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1일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은 총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국가총동원, 총동원물자, 총동원업무를 정의한 것이고,<sup>4)</sup> 제4조

3)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용어는 영어로 general mobilization system, total mobilization system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이 용어의 일본어 출처는 國家總動員, 國家總動員體制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national total(또는 general) mobilization, national total(또는 general) mobilization system과 같은 용어가 탄생한다. 영어 문헌에서는 mobilization이라는 단어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전쟁수행이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양상을 표현하고 있고, national mobilization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4) 각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는 것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것을 말함. 제2조 본 법에서 총동원물자라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함. 1. 병기, 함정, 탄약, 기타 군용 물자, 2.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피복, 식량, 음료 및 사료, 3.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계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및 가족위생용 물자, 4.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馬), 기타 수송용 물자, 5.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통신용 물자, 6.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7.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연료 및 전력, 8. 앞의 각 호에 열거한 것들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 기구, 장비, 기타 물자, 9. 앞의 각 호에 열거하지

부터 제20조까지는 이른바 전시규정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징용을 통한 인적 동원, 노무·물자·무역·자금·물가 등의 경제통제, 물자 및 시설의 사용 및 수용, 언론 및 출판의 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sup>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이른바 평시규정으로 불리던 것으로 국민등록, 기능자 양성, 총동원물자의 보유명령, 총동원업무의 사업계획 설정, 총동원물자의 시험연구명령, 사업조성(총동원물자의 생산자 및 수리자에 대한 이익 보장 혹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들이고,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는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며, 제50조는 자문기관인 국가총동원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다(朝日新聞社 1938).<sup>6)</sup>

국가총동원법은 각 조문에서 칙령에 위임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1943년 3월까지 167개 칙령, 각령, 성령이 공포되었고 이러한 시행령을 통해 총동원체제의 실제적 양상이 구체화되어 갔다. 이 법률은 일본 내지(内地)뿐만 아니라, 조선, 대만, 사할린(樺太) 및 남양군도와 같은 식민지에도 1938년 5월 5일부터 마찬가지로 시행되었다. 다만, 관동주(關東州)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으며, 만주국도 논의가 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전쟁수행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동원, 전시경제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각종 통제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민 생활과 사상의 통제에 관해서는 제20조 신문·출판물 제재에 관한 제한·금지 조항과 제3조 총동원업무의

---

않은 것으로 칙령(勅令)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물자. 제3조 본 법에서 총동원업무라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함. 1. 총동원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또는 체신에 관한 업무, 3.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금융에 관한 업무, 4.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기숙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 7.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몽선전에 관한 업무, 8.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비에 관한 업무, 9. 앞의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업무.

- 5) 그동안 국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징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해 제국신민을 징용해서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병역법의 적용을 면하도록 하지 않음. 이 규정은 1939년 7월 8일 공포되었던(일본 내지에서는 7월 15일부터,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군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 국민징용령과 7월 15일 공포되었던(7월 15일부터 시행) 국민징용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 6) 관련 법률로서 국방보안법과 근기보호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부 내용을 통해 간략한 규정만을 담고 있다. 국민 생활과 사상의 통제는 국가총동원 법령에 의존하기보다 1937년 이후 소위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을 표방한 관변단체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일제의 총동원체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총동원 관계법령과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라는 쌍두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은 일제의 군부와 정부 당국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서구제국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를 학습·모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전쟁양상은 일제의 정계·재계·군부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제 육군은 1915년 12월 임시군사조사위원회(臨時軍事調査委員會)를 설치하여 전쟁 양상에 대한 세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럽에 군사전문가를 파견하여 전쟁 상황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일제 정부는 1918년 3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수공업동원법(軍需工業動員法)을 제정하였고, 6월 이 법의 시행기관으로 군수국(軍需局)을 설치하였다. 총력전 준비와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 조치가 실현되었지만, 서구제국의 실례를 번역하는 수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군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였다. 1919년 군수국은 통계국과 합병하여 국세원(國勢院)으로 전환되었고, 1922년 국세원은 폐지되었다. 1925년 군부의 압력을 받은 의회에서 국가총동원 준비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정부는 국가총동원 기관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연구를 거쳐 1927년 자원국(資源局)을 설치하였다.

자원국은 1937년 기획청과 합병하여 기획원으로 확대되었고 기획원(企劃院)이 국가총동원법 제정의 주관기관이 되었다.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10년에 걸친 자원국의 연구결과라고 이야기되었다. 자원국은 프랑스총동원법안, 체코슬로바키아국가총동원법안, 영국국방조례, 독일국전시법령, 미국의 개정국가총동원계획, 미국전시식량정책, 전시산업동원에 관한 제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일제의 사정에 맞는 법령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자원국은 임시의회에 국가총동원법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음 해 기획원이 국가총동원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唐島基智三 1938: 10-18). 경성제국대학 장서에는 일제 당국이 서구 각국의 총동원법안과 전시경제제도를 분석한 문헌들이 있으며, 서구제국 총동원체제의 학습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資源局 1929, 1930; ブクシュ 1937; カル・ヘルフエリヒ 1940; ビターソン 1940; トビン・ビッドウェル 1941; 東亜研究所 1944).<sup>7)</sup>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2월 의회에 상정된 후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되었다(朝日新聞社 1938: 73-75). 이러한 논란 중에는 우선 위헌론이 있었다. 당시 헌법 제2조에 규정된 신민의 자유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것으로 전시에 천황이 행사하는 비상대권밖에 없는데 국가총동원법이 천황의 비상대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총동원법 제정으로 인해 일제의 전시체제를 운영하는 기구는 천황의 비상대권을 실행하는 군기군령기관인 대본영(육군 참모본부와 해군 군령부로 구성)과 국가총동원법령을 실행하는 내각으로 이원화되었고, 이 내각의 권한이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의 논란으로는 백지위임론이 제기되었는데, 국가총동원법의 많은 조문이 구체적 조치 내용을 칙령 이하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이 정지된 채 정부(내각)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내각의 독재 논란은 정군(政軍)관계에서 군부가 내각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과도할 경우에 내각 독재는 곧 군부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내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수차례 이어졌고, 의회의 정당 정치는 거의 마비되었다. 의회에 진출한 군부 세력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천황을 보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전쟁지도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加藤陽子 2005a).

한편 애국심에 관한 논란도 있었다. 국가총동원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국민들의 애국심 발동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사실 일제의 국가총

---

7) 한편 전후 서구 각국의 전시(戰史) 서술 기관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준비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한 문헌들이 있다(Smith 1959; Fairchild and Grossman 1959;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2003 등).

동원법은 전쟁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제정이라기보다 기존의 관련 법제를 정비해서 일원화하는 의미가 있었고, 어떠한 법률적 조치 이전에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현과 애국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시에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

총동원 관계법령의 제정을 통해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결코 순조롭게 운영된 것은 아니다. 군수물자 공급을 위한 생산력 확충은 기대치를 밑돌았으며, 민수물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암시장의 불법적 경제행위가 전시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총동원물자 사용수용령, 공장사업장 사용수용령, 토지가옥 관리사용수용령은 자유주의경제와 사유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재정 및 실물경제의 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1940년 제2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은 경제신체제(經濟新体制) 수립과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 결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신체제운동에 나서게 되고, 1941년 3월 경제통제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총동원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朝日新聞政治經制部 1941; 小林英夫 2004: 100-158).

### 3. 서구제국 동원체제에 대한 학습과 창안의 요소들

#### 1) 서구 전쟁론의 학습과 일제 지도층의 자기성찰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 이후 일제 당국과 연구자들은 서구의 전쟁사 및 전쟁론을 총력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이에 관해 정형화된 지식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전쟁 양상은 전쟁에 참여했던 서구 각국에서 중차대한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19년 6월 베르사유조약 체결 이후 표면적으로는 반전평화주의 및 군축협상과 반제국주의가 세계적 조류를 형

성했지만, 각국의 군부와 정부는 다가올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간 전쟁 경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 각국에서는 이전의 전쟁사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전쟁 양상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가 선택적으로 일본에 수용되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언론인인 레온 도데(Léon Daudet)가 1918년 『총력전(*La guerre totale*)』이란 저서를 발간하고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纒纒厚 2010: 21-22), 1930년대 후반 일제의 군사관련 문헌에서는 1832년 『전쟁론(*Vom Kriege*)』를 저술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년)와 1935년 『총력전론(*Der Totale Krieg*)』을 저술한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1865~1937년)의 전쟁론이 총력전 논의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시기에 프로이센 육군대학 교장을 역임한 군사이론가였으며, 루덴도르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육군 참모차장을 역임한 실력자였다.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계속에 다름 아니다.”라는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루덴도르프는 “정치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전쟁의 계속에 다름 아니다.”라는 언명을 통해 당대 전쟁의 특징적 양상을 설명하고, 총력전이란 용어를 유행시켰다. 현대의 총력전 논의에서 루덴도르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그의 『총력전론』은 이 언명을 포함해 당대 독일 지식인과 군사이론가들 사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던 여러 전쟁론을 차용해서 짜깁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재해석했다는 평가도 있다(Chickering 2003: 151-178; ジェン・ヴィレムホー二ツヒ 2012: 29-42). 어쨌든 과거나 현재에 이 두 인물의 전쟁론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그 속에 총력전 개념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수천만 명의 사상자와 천문학적 규모의 물적 피해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의 무자비한 파괴와 광기의 폭력에 대해 루덴도르프는 ‘전쟁을 위한 전쟁’, 즉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의지나 인간의 야만적 폭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고, 그것을 총력전의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9세기 초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이러한 전쟁은 ‘절대 전쟁(absolute war)’이라는 일종의 이념형적 전쟁 형태로만 제시되었고, 외교적 수단의 존재로 인해 현실의 전쟁으로는 발생하기 힘들다고 간주되었다.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개념은 정부나 내각의 정치 논리보다 우위에 선 군부의 전쟁수행 논리를 대변하는 의미가 있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의 군사이론가, 사상가,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어 전쟁에 대한 정당화와 찬미론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었다(長谷川正 1938; 歴史教育研究会 1938; フラ- 1940; 菊池春雄 1942; 加田哲二 1943).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지지하면서 총력전을 설명하는 이론가도 있었다(土屋喬雄 1943: 77). 총력전의 본질 역시 이전의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으며, 전쟁 당사국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복잡하고 첨예할수록 더욱 파괴적이고 무제한적인 전쟁 양식이 등장한다고 보았다.

총력전은 전쟁의 목적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의 양식을 개념화한 용어라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체주의국가, 민주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가 전쟁의 목적과 대의명분은 달리 했을지 몰라도 총력전이라는 공통의 전쟁양식을 채택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자연발생적 총력전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국가들이 사전에 준비한 의식적 총력전이었다.<sup>8)</sup> 1915년 영국정부가 군수성(Department of Munitions)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군수 생산 및 조달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 총력전체제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서구 각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까지 더욱 효과적인 총력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 모방과 경쟁을 계속해 나갔다.

총력전이 이전의 전쟁 양식과 다른 점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로 지적될

8) 후세에 총력전으로 불릴 만한 새로운 전쟁 양상은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우연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hickering and Förster 2003: 5). 1916년 서부전선에서 지속된 독일군과 연합군의 오랜 소모전은 개전시 준비된 병력과 군용물자를 대부분 고갈시켰고, 이후 교전국들의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수 있다. 첫째, 총력전은 근대 국민전쟁(국민 대 국민의 전쟁)이 최고도로 발전된 전쟁 양식이었고, 둘째, 총력전은 전장에 나타난 전투력(무력)의 대결만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가능한 군사, 경제, 정치, 사상, 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 전체를 가지고 벌이는 대결이다. 첫째는 군사 동원과 국민국가 형성 및 통합에 관한 문제로서 다음 절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얼마나 효과적인 총동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둘째의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산업혁명 이후 서구각국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고, 병기의 기계화 및 동력화와 항공기, 탱크, 잠수함, 독가스, 무선통신과 같은 신병기의 등장이었다.<sup>9)</sup> 총력전으로서의 제1차 대전은 개별전장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섬멸을 위해 여러 번의 결정적 전투(決定的な戦闘, *decisive battle*)<sup>10)</sup>를 치러야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지속되는 지구전이자 소모전이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은 일제 당국의 심각한 자기 성찰을 촉발했다. 일제의 군부와 정재계 인사들은 제1차 대전의 교훈으로서 자국의 자원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山室信一 2011: 155-166), 이 위기감은 일제 총동원체제의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1930년대 이후의 역사적 과정에서는 군부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동기가 되었고, 경제정책과 식민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1915년 12월 설치된 일제 육군의 임시군사조사위원회와 그 외 조사연구부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부터 이미 많은 보고서를

- 
- 9) 경성제국대학 군사 분야 장서에서 병기의 기계화에 관한 문헌 4건, 항공기 관련 문헌 5건, 방공에 관한 문헌 9건, 독가스에 관한 문헌 5건, 잠수함에 관한 문헌 3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국 군비 상황과 신병기를 소개하는 회한서 및 영어 잡지도 수 건 소장되어 있다.
- 10)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개별 전장의 전투를 말하는 것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등장하는 핵심 용어로 알려져 있다(ジャン・ヴィレムホーニツヒ 2012: 39-42).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전쟁을 관찰한 클라우제비츠는 교전 주체가 인적·물적 전력을 집중시키고 최고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 결과가 한 쪽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별 전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일반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비해 1930년대 중반 루덴도르프에 의해 총력전으로 개념화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은 적(국)의 섬멸(*annihilation*), 즉 동원가능한 인적·물적 전력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낳았다.

발간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국가총동원 계획 수립과 장기소모전에 인내할 수 있는 정신적·사상적 단결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역설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경제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자원 확보와 자급자족 경제체제의 구축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자원 확보의 방안으로 제출된 것이 중국대륙 진출이었으며, 이러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소장 장교들이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수행의 핵심세력이 되었다(羅纘厚 2010: 21-58, 209-255).<sup>11)</sup> 자원부족에 대한 인식은 서구제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자급자족적 경제 블록의 구축에 대한 요구를 낳았고, 이 요구는 1930년대 이후 군부의 침략전쟁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식민정책론에 있어서는 대동아공영권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저변의 동력이 되었다(진필수 2015). 주지하다시피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방향에 관해서는 명치시대부터 북진론과 남진론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194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대일금수(對日禁輸)정책에 대항한 자원 확보의 대안으로서 남양(南洋: 여기서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대동아전쟁’이 결행되었다(Barnhart 1987).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거쳐 1940년대 초반 완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 시점에서조차 일제 지도층은 군비와 경제적 측면에서는 반추축국(미국, 영국, 소련 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정치적·사상적 단결만이 승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土屋喬雄 1943: 266-268). 일제 지도층이 자원부족의 문제를 만회하는 또 하

11)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일제 육군의 소장 장교들이 제안한 총력전 준비 계획은 1918년 군수국 설치에까지 이르렀다가, 1920년대 국내의 정세 속에서 더 이상 구체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로 종결되었다. 전시체제에 대비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본적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와 같은 기성재벌들은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 일제의 총력전 준비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관동군의 점령지 정책이 본국으로 파급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만주사변을 획책한 중심인물로 알려진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는 만주 점령의 성공을 통해 국내정치 개편, 나아가 군 주도의 국가개조를 도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1937년부터 실시된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은 군수공업 육성을 통해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총력전계획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고, 만주의 이러한 움직임을 계승해서 본국에서 실천한 기관이 바로 기획원이었다. 일제의 총력전계획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군부 주도로 뒤늦게 실천에 옮겨졌지만, 군수물자 공급을 위한 단기간의 생산력 확충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일제의 총력전과 전시경제 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허약성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小林英夫 2004: 110-133).

나의 방안으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창안한 것이 정신동원(精神動員)이라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일제 총동원체제를 특징짓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선(front, 戰線)의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총후(home front, 銃後)의 재조직과 국민동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신적 교화가 제1차 대전 무렵부터 일제 당국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했으며(瀨瀨厚 2010: 135-158; 山室信一 2011), 상기한 바와 같이 1937년 9월부터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3, 4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국민동원(national mobilization)의 계보와 일제 정신동원의 의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서구 각국의 국민동원은 봉건시대 군주 대 군주의 전쟁, 또는 내각 대 내각의 전쟁과 달리, 국민 대 국민의 전쟁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새로운 전쟁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의 한 연구자는 국민동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국민이 먼저 존재해서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에 의해 주민은 국민으로 변화해 간다.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국민이 되어 간다. 국가의 동원이 처음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의 동원은 주민들에게 서서히 확대침투해서 결국에는 ‘총동원’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桑野弘隆 2014). 서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점에서 이미 ‘총동원’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과 노무자로 동원된 인원수는 독일 약 1,325만 명(전인구의 19.7%, 이 중 동원병력 약 715만 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약 900만 명(17.3%, 약 705만 명), 영국 약 947만 명(10.8%, 약 524만 명, 식민지로부터의 동원인원 약 450만 명), 프랑스 약 820만 명(17.2%, 약 565만 명, 식민지로부터의 동원인원 약 140만 명), 이탈리아 약 561.5만 명(15.5%, 약 405만 명), 러시아 약 1,800만 명(12.0%, 동원병력 불명), 미국 약 380만 명(3.8%, 약 375만 명)을 기록했다(土屋喬雄 1943: 40; 瀨瀨厚

2010: 25). 이 수치는 유럽 각국에서 전투가능한 청장년 남성 인구의 40~60%가 동원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군사동원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은 당대 일제 군부와 정계의 지도층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근대 서구제국 인민들의 애국심, 국민의식, 내셔널리즘은 정치적·문화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자주 설명되어 왔지만, 전쟁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주변국 군주세력의 간섭에 대한 프랑스혁명 전쟁(1792~1802년)과 나폴레옹 전쟁(1803~1815년)에서 프랑스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의 혁명정신과, 생명과 재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단위로써 국민국가를 선택했고, 개병제를 창설하고 국민군에 헌신함으로써 프랑스 국민이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전파하고 유럽 각국의 인민들을 군주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이 정복 전쟁으로 변질되자, 이번에는 유럽 각지의 인민들이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군과 국민국가의 정체를 만들고 헌신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획득했다.<sup>12)</sup>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서구 각국의 대대적 국민동원은 국민국가 형성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현상이고, 그 요체는 시민들의 애국심과 높은 수준의 자발성이었다.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관한 당대 논의에서는 국민동원의 시발점을 프랑스혁명 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으로 잡는 것이 정설화되어 있었고(唐島基智三 1938: 1-3), 총력전의 전체적 양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년)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Freytag-Loringhoven 1918; 土屋喬雄 1943: 147-151).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전쟁들은 국민동원의 측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으로 간주되었으며, 일제 지도층은 서구 모델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국민동원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2) 국민동원이나 총력전의 시초로서의 프랑스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Moran and Waldron 2003; Chickering, Förster, and Greiner 2010).



근대 일본의 국가 통합도 연속되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sup>13)</sup> 명치정부는 1873년 징병령을 제정하였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징병령은 1927년 병역법으로 변모했다. 명치정부는 징병제를 통해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국민군 제도를 모방했지만, 시민계급의 자발성보다는 국가권력의 강제성에 기초해 있었다. 근대 일본에서 병역의 의무는 신민(臣民)의 의무로 부과되었고, 그마저도 제한적이었다. 1897년까지 일본의 상비군(현역병)은 징병가능 인원의 10% 이내에 머물러 있었고, 5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정부는 군사동원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 근대 일본의 전쟁사에서 최고의 성공담으로 회자되는 러일 전쟁을 통해 명치정부는 146,900명의 현역병과 426,246명의 보충병(합계: 573,146명), 그리고 후방의 보충역까지 포함해 총 1,088,996명을 동원하였다(加藤場子 2005b: 6-24, 72-81, 147).<sup>14)</sup>

러일전쟁의 성공적인 국민동원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은 일제의 군부와 정계 지도층에게 국민동원의 내실에 대한 고민을 안겨다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서구 각국의 동원 양상은 신속한 동원과 장기전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들의 심리적 자발성과, 전장의 전투능력을 고양시키는 정신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지역공동체에 할거해 있던 일본의 신민(臣民)들에게 국가·국민은 여전히 강제적이고 현실적 절박함이 약한 동원의 논리일 수 있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8년 독일군 내부의 사회주의 반란은 계급과 사회주의라는 또 하나의 동원 논리의 성장을 알리는 것이었다. 문제는 지역주의나 계급의식과의 경쟁을 뚫고 서구 국민들의 시민성과 자발성을 능가하는 국민동원의 방식과 논리를 고안하는 것이었으

13) 일본은 1869~70년 무진전쟁(戊辰戰爭), 1874년 대만출병(台灣出兵), 1877년 서남전쟁(西南戰爭), 1894~5년 청일전쟁, 1900년 북청사변(北淸事變), 1904~5년 러일전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칭다오(靑島) 독일군 공격, 1920년 시베리아 원정, 1928년 제남사건(濟南事件), 1931년 이후 만주사변, 1937년 이후 중일전쟁, 1941년 이후 태평양전쟁을 통해 국민국가의 통합을 달성하고 제국으로 성장했으며, 최후에는 제국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14) 1873년 일본의 징병령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군제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상황은 프랑스혁명을 통해 생성된 민병제의 이상이 부정되고 현역병 복역기간의 유지와 정규군 강화가 주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며, 일제의 정신동원은 미성숙한 애국심과 국민의식의 배양에 집중되었다.

### 3) 총후(home front, 銃後)의 재조직과 나치스 독일의 모델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동원은 일제의 정부 및 군부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 국가총동원법과 함께 국민동원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룬 것이 국민정신총동원이었고, 이것은 정부 주도의 관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국민 생활의 계도와 정신의 교화를 추진하는 관제운동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이전에도 여러 예가 있었다. 러일전쟁 직후에는 지방사회의 전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지방개량운동(地方改良運動)이 전개된 바 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3년 관동대지진을 전후한 시기에는 내무성·문부성 및 관변단체를 통해 국민정신작흥운동(國民精神作興運動)과 생활개선운동(生活改善運動)<sup>15)</sup>이 추진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이러한 관제운동의 경험 위에서 서구의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에 대한 학습 성과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의 국민정신총동원은 정규군을 뒷받침하는 비전투원, 이른바 총후의 재조직과 국민정신 및 사상의 교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민의 조직적·사상적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분석한 일제의 군부 엘리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고, 이른 시기부터 실제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 총후의 재조직은 민간조직의 개편이나 관제·관변조직의 신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재향군인회(在郷軍人会)는 퇴역군인(예비역, 후비역 등)의 전국조직으로서 러일전쟁의 교훈에 따라 대량의 병력동원에 대비하기 위해 1910년 11월 창설되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고양되는 정세에 대응하여 재향군인회는 사상 선도의 역할을 자임하고, 공안유지와 함께 청년단 및 학교의 군사훈련에 적극 개입하는 조직으로 재편

15) 생활개선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주민의 자발성을 강화한 방식으로 일본에서 전개된 바 있고,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촌진흥운동이나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의 연관성도 흔히 지적된다.

을 거듭하였다. 일제 정부는 군부의 압력에 따라 청년단 조직을 전국적 통일 조직으로 재편하고, 1925년에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별도의 관제 청년단체를 결성하였다. 또한 일제 육군은 1920년대에 이미 국가총동원 ‘준비시설’의 설치에 돌입하였는데, 1924년에는 학교교련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1926년에는 문부성 주도 하에 청년훈련소가 설치되고 교련사열관이 배치되었다(纘纘厚 2010: 139-152).

일제 정부는 1937년 8월 24일 〈국민정신총동원실시요강(國民精神總動員實施要綱)〉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9월 13일 이 요강을 실시방침과 함께 국민들에게 공표했다(吉田裕 1984; 纘纘厚 2010: 192). 이 요강은 거국일치·진충보국(盡忠報國)·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으로 관민 일체의 대대적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었다. 실시기관으로는 정부의 정보위원회, 내무성 및 문부성이 계획주무청(計劃主務庁)이 되고, 국민운동의 추진을 위해 유력한 외곽단체의 결성을 도모하는 방침이 명시되었다. 9월 27일 9명의 유력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선정되었고, 내무대신, 문부대신, 내각서기관장이 이들에게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의 설립을 위촉하였다. 9월 30일에는 내무대신, 문부대신, 내각서기관장이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에 가맹해야 할 단체의 대표자들을 수상관저로 초대하였는데, 전국정총장회, 전국시장회, 대일본소방협회, 일본적십자사, 일본의사회, 일본노동조합회의, 전국농민조합, 전국신직회, 불교연합회, 일본기독교연맹 등 62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10월 12일에는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74개 가맹단체가 참여한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회장에는 아리마 료키츠(有馬良橘) 명치신궁 공사 겸 추밀원 고문관(과거 해군대장 역임)이 위촉되었고, 이사에는 상기한 9명의 발기인에 6명이 더해져 15명이 선임되었다. 평의원에는 74개 가맹단체의 대표들이 취임하였다(長友安隆 2001: 56-59). 이렇게 해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의 이원적 체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포괄적인 국민조직의 구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중앙에는 정부의 계획주무청과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이라는 관민 대표기관이 있었고,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 산하의 직능조직으로서 제국재향군인회, 해군유종회, 장년단중앙협회, 대일본국방부인회, 대일본연합청년단, 대일본연합여자청년단, 대일본소년단연맹, 제국교육회, 사회교육회 등 상기한 74개 가맹단체가 있었다(小松東三郎 1940: 239-296). 이 조직 구성은 행정의 지휘계통을 따라 도부현(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의 지방행정 단위에도 그대로 복제되었다. 도부현에서는 도부현청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 행정부서와 74개 가맹단체의 지부가 협력하는 관민합동의 지방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시정촌에서는 시정촌장 및 행정부서가 74개 가맹단체의 지부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조직인 부락회(部落會) 및 정내회(町内會), 각종단체, 직장을 단위 조직으로 편성하는 작업이 추가되었다. 나아가 부락회 및 정내회 내의 소규모 실행조직으로서 인보반(隣保班)의 편성 내지 동원이 독려되었고, 시정촌과 부락회 및 정내회가 수립·실행하는 실시계획은 각 가정에까지 원활히 침투해야 하는 것으로 지도되었다(ibid.: 29).

〈국민정신총동원실시요강〉은 지방행정 조직에 기초한 지역별 편성을 국민조직의 기본축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 은행, 공장, 상점 등 직장별 국민편성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에 적극적 협력을 구할 것과 특히 라디오 이용의 중요성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언론 통제와 동원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문예, 음악, 연예, 영화 등의 관계자들에게도 협력을 구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으며, ‘실시상의 주의’에는 종래 도시 지식계급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출선수범을 요청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실시요강〉은 서구 각국의 총력전 양상을 통해 학습했던, 소위 사상전(思想戰), 선전전(宣傳戰), 경제전(經濟戰), 국력전(国力戰)을 일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실천해 가는 첫 걸음이었다.

국민정신총동원의 전개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小松東三郎 1940: 1-17; 大室政石 1994). 제1기는 1937년 10월부터 1939

년 3월까지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이 결성되어 거국일치의 국민조직이 구축되어 가는 시기이다. 제2기는 1939년 4월부터 1940년 3월까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이 확충되고 실천망이 정비되는 시기이다. 제3기는 194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관민협동의 운동조직이 국민정신총동원본부(國民精神總動員本部)로 일원화되어 새로운 단계의 운동을 전개하다가 제2차 고노에내각 하에서 신체제운동의 추진조직인 대정익찬회의 발족과 함께 발전적 해체를 하는 시기이다.

10여 명의 직원으로 운영된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 사무국은 1937년 10월부터 193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94회의 각종 회의 및 위원회와 전국 각지 286개소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연인원 494명의 강사를 파견·알선하였다. 기관지인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은 6회 432,500부를 발행하였고, 팸플릿 및 리플릿류는 30종 50만 부, 엽서 3종과 견인장(堅忍章) 배지를 각각 10만 개씩 배포하였다. 각종 행사로는 시국자료전람회, 영화 및 라디오 활동, 애국공채구입운동, 가정보국운동 등을 수행하였다. 1937년 11월에는 5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구체적 실천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5개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총후후원(統後後援)에 관한 조사위원회, 사회풍조(社會風潮)에 관한 조사위원회, 농산어촌(農山漁村)에 관한 조사위원회, 가정실천(家庭實踐)에 관한 조사위원회, 실천망(實踐網)에 관한 조사위원회이다. 특히 실천망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전국적 실천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대사업으로서 오인조(伍人組), 십인조(十人組), 인보반, 정내회, 부락회의 종래 관행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1938년 들어서는 장기전에 대비한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 조직의 확대 강화(제1차 기구개혁)가 단행되었다. 경제계, 언론계, 정당대표자 등의 민간 유력인사와 경제산업관계 각 성의 차관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이사가 30명으로 늘어났고, 가맹단체도 91단체로 확대되었다. 국민 정신 및 사상의 교화에 중점을 둔 운동의 영역도 소비절약, 물자활용, 저축장려와 같은 경제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1938년 6월 23일에는 비상시생활양식위원회(非常時生活樣式委員會)가 설치되어 신조견합(新調見合), 증답폐지(贈答廢止), 복

장간소, 연회제한 등의 국민실천 사항을 결의하였다.

1939년 1월 히라누마 내각(平沼内閣)이 출범한 후 대폭적인 조직 개편(제2차 기구개혁)이 단행되어 정부 각 성의 차관들이 이사에서 제외되고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활동 초기 6개월 동안 10만엔의 문부성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의 예산은 1939년도에 1,033,801.26엔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실천망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상의하달(上意下達)과 하정상통(下情上通)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부락회, 정내회, 인조(隣組)의 모임 및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한가에 대한 빈번한 시찰과 점검이 진행되었다. 1939년도 말 인조 조직의 전국적 보급률은 90%로 보고되었고,<sup>16)</sup> 실천망 조직을 운영할 지도자 양성에도 힘이 쏟아졌다.

실천망 정비 외에 언론과 부인회 인사들의 적극적인 운동 참여도 이 시기에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고마츠 도사부로(小松東三郎)를 비롯한 중앙 신문사 간부들의 간담회와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부인회 지도자들이 가정실천에 관한 조사위원회나 비상시생활양식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증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핵예방운동이 가맹단체들의 협력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1940년 들어 전황이 급박해지자 정부의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sup>17)</sup>와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의 이원적 조직이 갖는 비효율성이 부각되었고, 1940년 4월 24일 관민조직을 일원화한 국민정신총동원본부가 새롭게 창설되었다.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총리를 회장으로 한 25명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고, 사무국도 확대·개편되었다. 사무국에는 언론과 교육 관계자들

16) 이 숫자는 1939년 12월 내무성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부락회 및 정내회의 설치수는 시부(市部)에서 약 3만 5천(조직률 약 73%), 정촌부(町村部)에서 약 15만 6천(조직률 약 89%)이었지만, 이 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조직률을 산출하면 약 85%가 된다(山田修士 2015: 42, 95).

17)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는 1939년 3월 28일 히라누마 내각이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주도권은 이 위원회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瀧川厚 2010: 195-196).

이 대폭 충원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본부가 처음으로 착수한 사업은 전시식량보국운동이었으며, 물자 및 식량 부족에 대응한 혼식 및 대용식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1940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사치금지령에 호응하여 사치전폐운동(贅沢全廢運動)을 전개하였다. 1940년 7월 22일 출범한 제2차 고노에 내각이 10월 12일 대정익찬회를 발족시키자 국민정신총동원본부는 10월 23일 약 3년의 활동을 종료하고 대정익찬회로 흡수되었다.

대정익찬체제(大政翼賛体制)와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는 일제 총동원체제 및 총동원조직의 결정판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체와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익찬체제라는 것은 군부의 전쟁수행 전략을 추인하고 지원하는 정치·사회체제를 의미하는데, 이 체제의 중핵을 이루었던 대정익찬회가 어떤 성격의 조직이었는데 하는 점부터 논란의 영역에 있다(山田修士 2015: 1-8). 대정익찬회의 성격은 전쟁상황에 대응한 정치결사, 행정조직, 사회운동(국민운동) 조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제2차 고노에 내각의 신체제운동 속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해산하여 거국적 단일 정치결사가 구성되긴 했지만, 정치 파벌들 간의 견제와 대립으로 인해 발족 당시에 취지로 내세운 강력한 정치력은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대정익찬회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직과 유사하게 전쟁협력을 위한 거국적 국민운동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었고, 1941년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내무성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행정조직의 속성을 겸비하게 된다. 내각 당국의 협력과 통제 하에서 대정익찬회는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 성별 기준에 따른 국민조직 전체의 재편성을 추진해 나갔다. 직능별 조직으로는 대일본산업보국회 아래에 수많은 직종·직장의 보국회(報國會)가 결성되었다. 또한 연령별·성별 조직으로는 익찬장년단, 대일본청소년단, 대일본부인단, 학교보국대 등이 속속 결성되었다(白根孝之 1942: 157-204; 大串潤児 2005). 1942년 8월에는 내무성 지방행정 조직의 말단을 구성하는 부락회, 정내회, 인보반이 각의 결정에 의해 대정익찬회의 지도를 받게 됨으로써 대정익찬체제는 정점에서 말단까지의 국민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서 완성되었

다.18)

대정익찬체제·대정익찬회가 곧 일본 파시즘체제라는 통념이 있어 왔고, 이에 관해서는 1970-90년대에 활발한 연구가 있었다(赤木須留喜 1984; 吉見義明 1987; Garon 1997 등 참조). 대정익찬체제를 서구 각국의 정치·사회체제와 비교해 보는 시각은 그 체제가 성립되던 당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今中次鷹 1941; 白根孝之 1942: 145-171). 초기에는 독일 나치정당이나 이탈리아 파쇼정당을 모방하여 일당독재로의 정치 혁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고노에 내각의 신체제운동은 여러 정당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연합한 국민조직으로서의 대정익찬회를 주축으로 한 것이 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나치스와 파시스트의 정치 혁신이 선행된 이후 전쟁으로 나아갔지만,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혁신이 추진되었다. 정군(政軍) 관계의 측면을 볼 때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당과 내각이 군부를 통제하는 체제가 구축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정당과 국민조직이 군부의 전쟁수행을 지원(즉, 익찬)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군부, 정부(내각, 행정조직), 정당(의회), 국민조직(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위·아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는 일당독재를 통해 국민들의 대대적이고 자발적 전쟁협력이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이라는 후세의 평가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전체주의는 기존 정당들이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부와 정부가 전쟁협력을 위한 국민조직의 창설 및 운영에 지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대정익찬회가 내무성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적 행정기구에 종속되

---

18)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서는 내무성이 계획주무청이었기 때문에 부락회, 정내회, 인보반을 자연스럽게 이 운동의 실천망으로서 위치시켰지만, 대정익찬운동에서는 부락회, 정내회, 인보반을 대정익찬회의 하부조직으로 삼는 것에 반대했다. 1941년 4월 대정익찬회가 내각과 군부에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내무성의 통제를 받는 국민(운동)조직으로 개편된 후에야 내무성은 부락회, 정내회, 인보반에 대한 대정익찬회의 '활용'을 허용했다는 분석이 있다(山田修士 2015: 63-78).



고 내각과 군부의 전쟁지도 방침을 국민들에게 하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나, 행정조직과 국민조직을 통솔하는 정점에 있었던 내각이 다종다양한 정치세력, 사회단체, 군부의 의사를 조정하는 데 급급해 일관된 전쟁지도 방침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에 착목하여(赤木須留喜 1984 참조), 관료주의적 파시즘이나 주체 없는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조직 내부에는 명치시대 이후 성장해 온 중간계급,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각종 관계운동에 참여해온 소위 외곽단체나 교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이들이 정부 시책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했던 양상과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Garon 1997: 3-22). 나아가 일제의 풀뿌리 민중들이 1930년대 중반 이후 군부 쿠데타(5·15사건과 2·26사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 성전(聖戰) 이 대을로기에 반발하면서도 경제적 빈곤과 다양한 동기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측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吉見義明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과 자발성이 서구 각국에서 나타났던 시민적 자발성과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은 사상사적 논의를 통해 음미해 볼 수도 있다(나카노 토시오 2001: 159-175).

소위 위·아래 파시즘론은 전후 전쟁책임론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가 되어 왔는데, 본 연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총후의 재조직과 관련해서는 사회인류학적 연구의 중요한 논제들이 있다. 각종 사회조직이 총동원체제를 지나면서 어떠한 변형을 겪고 전후에 어떻게 재조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산업별 조직의 재편 양상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사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온 것 같다(이종구 2010). 이에 비해 부락회, 정내회, 인보반과 같은 지역별 조직의 재편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일본의 대표적 지역조직인 정내회의 변천 과정을 일제 군국주의나 국가총동원체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이시재 2001: 18-27),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나 대정익찬체제와 같이 당시의 시대적 조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 지역사례에 대한 치밀한 자료수집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작업

이다. 역으로 지방행정의 말단조직인 동시에 주민자치 조직인 부락회, 정내회, 인보반에 대한 통제의 정도와 방식, 전쟁협력의 양상은 일제 총동원체제의 성격과 유효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총후의 재조직에 있어 서구 각국에 대한 일제당국의 관심은 전쟁에 상황에 의해 굴절되어 있었다. 반추축국 총후 사정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긴 했지만, 적국 연구의 차원에서 이용되거나, 모방 및 참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대중들의 적대심과 사상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선전물로서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많다(伊藤安二 1944). 미국의 학도병 조직과 생활, 참전병사 교육 내용 등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Nixon 1939; Griffin 1942; Slosson 1942), 지원병 제도의 전통과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동원 논리가 일제의 그것과 매우 상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중일전쟁 이후 전황이 급박해질수록 국민정신 동원의 측면에서는 서구 모델의 학습과 모방이 정지되고 일본 특유의 문화와 사상이 갖는 가치를 선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치스 독일의 모델이다. 경성제국대학 장서를 살펴보면, 나치스 독일의 총후조직, 청소년 국방교육, 히틀러 청년대(Hitler Jugend)의 활동 양상 등이 여러 문헌에서 폭넓게 참조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クーク 1937; 二荒芳徳 1938; 二荒芳徳・大日方勝 1938; 朝比奈策太郎 1939; ヘルム-ト・シュテルレヒト 1940). 그리고 전체주의나 일당독재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졌던 이탈리아와 소련의 사정이 참조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 청소년단의 육성 방향을 논의할 때 독일 히틀러 청년대, 이탈리아의 리토리오(littorio) 청소년단, 소련의 콤포몰(Комсомо́л)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리(公利)는 너희들의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니』라는 동양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은 독일 국가사회당원의 표어로서 현재 이 당 정책의 핵

---

19) 미국의 지원병 교육훈련에서는 전쟁의 대의명분을 교육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총기 사용법, 군대 조직의 운영 원리, 전장에서의 정보 채취와 보고 방법 등 전투 기술을 교육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 교육이 독일과 일본에서는 청소년 조직에서 이미 시행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심을 이루고 있다. 이 당의 궁극 목표는 각각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유효하고 열심히 봉공(奉公)을 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훈련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독일을 국제사회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은 원동력이다”(クーク 1937: 61). 이 문구는 영국육군 포병 중위가 영국 군사잡지에 기고한 글을 일본 해군예비역 단체가 기관지에 번역해서 실은 글의 첫머리이다. 이 문구는 나치스 독일의 총후 조직에 관심을 갖고 그 장점을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일본 쪽의 동기를 집약하는 면이 있다. 반추축국의 자유주의와 물질주의에 선명하게 대비되는 독일의 전체주의는 국민동원의 논리로서 일제의 전체주의와 호환성이 높은 것이었다. 총후의 재조직에서 일제의 군부와 지도층은 시민적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애국심의 배양과 규율 및 통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모델을 나치스 독일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공익우선원칙(公益優先原則)과 지도자원리(指導者原理)는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표어였고, 1940년 제2차 고노에내각의 신체제운동은 이러한 정책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일제 지도층이 전시 경제통제와 사회체제의 골격을 구상하던 시기에 나치스 독일의 모델은 체계적으로 학습되고 참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1939~41년 진행된 『新獨逸國家大系』 12권의 간행사업이었다. 이 문헌은 1936년 나치스가 국가적 사업으로서 편찬한 『Die Grundlange, der Aufbau und die Wirtschaftsordnung des nationalsozialistischen Staates』(전 3권)을 번역한 것으로 나치스 독일의 법률, 정치, 경제, 교육 체계를 공식적으로 소개·해설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재계와 관계의 중요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제국대학의 일급 학자들이 직접 번역을 담당했다(柳澤治 2003: 67-72). 이 문헌은 경성제국대학 장서에도 소장되어 있다(新獨逸國家大系刊行會 1939~41).

1936년 11월 25일 일독방공협정(日獨防共協定)이 체결된 이후 히틀러 청년대와 대일본청년단(大日本青年團)은 1938년과 1940~41년에 두 차례의 상호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양국에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청년단 조직 및 교육에 대한 상호 모방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大串隆吉

1996). 대일본소년단연맹(大日本少年團聯盟) 이사장으로 이 행사의 일본측 산파역을 한 후타라 요시노리는 히틀러 청년대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상세히 소개한 문헌을 저술했고(二荒芳徳·大日方勝 1938), 문부성 관방문서과장으로 제1차 방문단장을 역임한 아사히 사쿠타로는 귀국 후 청소년들에게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배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朝比奈策太郎 1939). 히틀러 청년대의 지도자가 직접 저술한 문헌이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명예와 혈통을 가진 독일의 군인정신을 독일 ‘무사도’ 정신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ヘルム-ト・シュテルレヒト 1940: 39-47).

#### 4) 국민정신총동원과 일본정신의 재발견

1937년 9월부터 시작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은 내각 당국의 지원 하에 각급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상동원과 각종 선전활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문헌들에서 외국사상 및 외국문화에 대한 엄격한 비판, 일본정신의 발현, 일본 고유의 풍속과 국토에 대한 애착 등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小野清秀 1937; 景山鹿造 1937; 瀬尾芳夫 1939; 大政翼賛會宣伝部 1941 등). 사상의 통제와 동원은 반추축국들의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침투되는 것을 막고 일본판 전체주의인 황도주의(皇道主義)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결속과 일체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서구제국주의로부터 대동아공영권의 해방과 황도주의의 전파라는 전쟁수행의 대의명분에 대한 선전도 주요 과업이 되었다.

일제의 총력전과 총동원체제가 서구제국의 그것에 비해 어떤 점에서 독보적이고 우월한 요소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당초 총력전을 준비했던 군부와 정계의 전략가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에 나선 지식인, 교육자, 종교계 인사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화혼양

재(和魂洋才)와 같이 근대 초기 서구문물을 수용하고 그것들과 융화하면서 주체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논리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국민정신총동원의 요체는 물질 자원과 경제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전 및 전쟁 자체의 승리에 열쇠가 될 일본의 힘의 원천을 찾고 선전하는 작업에 있었다. 이 작업은 정신적 측면에서 서구의 것과 다른 일본적 요소의 가치와 우월성을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일본(전쟁 말기에는 ‘대동아’) 특유의 정신, 사상,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sup>20)</sup> 황도주의를 뒷받침하는 신도(神道), 신화, 역사 등이 사상전(思想戰)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일본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상, 도덕, 풍속, 사물 등이 대중들에게 폭넓게 선전되었다(寺田弥吉 1942). 전쟁의 상황에서 동원된 일본인론·일본문화론이 등장하고(미나미 히로시 1999: 204-274), 전세가 불리해 질수록 서구적 합리성의 기준에서 통용되지 않는 종교성, 신비주의, 특수가치를 강조하는 일본정신론이 확산되어 갔다.

일제의 사상통제 및 사상동원은 192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를 배격·탄압하고 국가주의(statism)를 확립·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일제 정부는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의 단속 및 처벌을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고, 1928년 3월 일본공산당탄압사건(일명 3·15 사건)을 계기로 법적 처벌기준과 행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내무성은 특별고등경찰의 수를 대폭 늘렸고, 문부성은 1929년 7월 1일 학생과를 학생부로 승격시켜 각급 학교에서의 사회주의 운동 근절에 나서게 되었다. 1932년 8월 23일 문부성은

20) 이 시기 일본정신론의 대두와 확산은 두 가지 흐름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흐름은 지식계와 대중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등장·유포된 일본정신론이다. 1935년 일제 문부성 사상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정신에 관한 논의가 사회에서 폭넓게 확산된 것은 1931년경부터였다. 1930년대 일본정신론의 유행이 만주사변 이후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 간 군부의 군국주의와 일본 내 파시즘의 대두와 연관된 것이라는 인식은 당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戸坂潤 1966[1937]: 287-291, 322-327). 다른 하나의 흐름은 일제 문부성이 사상 통제와 국민 통합의 논리로서 유포시킨 ‘국체(國體)의 본의(本義)·일본정신(日本精神)’에 관한 담론이다. 고전연구와 역사연구에 기초한 관변의 일본정신론은 자가당착적 논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1941년 말 ‘대동아전쟁’ 발발 이후 ‘대동아공영론’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의 문제에도 직면하였다. 일본정신론은 일제의 관변 학계를 석권한 논의였지만, 전쟁 말기에 이르러 문부성 당국은 일본정신론을 국체에 관한 논의로 흡수시키고 대동아 논의로 사상동원의 무게 중심을 옮겨 갔다(駒込武·河村肇·奈須恵子 2011: 651-659).

국민정신문화연구소(國民精神文化研究所)를 설치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의 연구와 보급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3, 1939),<sup>21)</sup> 초기에는 ‘국민정신’의 불명확한 의미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이 무렵 군부가 사상통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1933년 4월 내각에 사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자, 문부성은 1934년 6월 1일 학생부를 사상국(思想局)으로 승격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사상통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1933년 일제 의회에서는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군부와 우익 정치 세력이 종래 국가공인의 헌법학설이었던 천황기관설을 부정하고 국체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을 전개했다. 그 결과, 당시 오카다 케이스케(岡田啓介) 내각은 1935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체명징성명(國體明徵聲明)을 발표하게 되고, 천황이 국가 통치기구의 한 기관이라고 보는 천황기관설 대신 천황을 통치권의 주체로 자각·인식하려는 ‘국체(國體)의 본의(本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천황기관설 사건은 천황이 곧 국가이고 천황에 대한 헌신이 곧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관념을 낳는 기점이 되었으며, 이 관념은 천황중심의 국가지상주의인 황도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국체론은 국민정신 논의의 모호성을 불식시키는 최소한의 인식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했다. 천황기관설 사건을 계기로 일제 문부성은 국체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불온한 학설을 검열·단속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1936년 9월 8일 일본제 학진흥위원회(日本諸學振興委員會)를 설치하여 사상 및 학문의 통제를 새로운 단계로 심화시켰다. 또한 문부성은 1937년 7월 21일 사상국을 교학국으로 개편하고 국체 관념의 보급과 일본정신의 계발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駒込武·河村肇·奈須恵子(編) 2011: 25-63).<sup>22)</sup>

21) 정성제국대학 장서에는 국민정신문화연구소가 편찬한 팜플렛, 잡지, 단행본이 31건 소장되어 있고, 특히 1933년부터 발간된 『國民精神文化研究所報』에는 사회주의 통제, 신도 및 황도, 국민정신의 고안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 있다. 국민정신문화연구소의 역할과 활동 궤적은 현대 한국의 경험과 관련시켜서 볼 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초기 활동을 검토하는 데에도 참조될 수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참조).

22) 1937년 6월 출범한 고노에 내각을 기점으로 일제 당국의 사상정책(문화정책, 언론정책까지 포함)이 사상통제에서 사상동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이 당대에 이미 제기되었다. 이 시

일본정신과 일본 국민성에 관한 논의는 명치시대 초기 구화주의(歐化主義)에 대한 반발로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계통과 흐름으로 이미 전개된 바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애국심이나 국수주의를 내포한 일본정신론이 확산되기도 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에는 국민정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과 1933년 3월 국제연맹 탈퇴로 군사화와 외교적 고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일제의 지성계와 대중사회에서는 국가주의 혹은 파시즘의 입장에 선 일본정신론이 횡행하기 시작했다(미나미 히로시 1999).

1933년 11월부터 1935년 6월까지 신조사(新思潮)에서 총 12권으로 발간한 『日本精神講座』는 파시즘 일본정신론의 집대성이자 서막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귀족원의장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로가 추천사를 썼고 각 권에는 10편 정도의 논문과 잡록, 이야기편이 실렸는데, 여러 학문분야의 박사, 대학교수, 교사, 육해군 장성 및 장교, 정치가, 귀족, 언론인 등 총 3백 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경성제국대학 장서에는 12권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일본의 저명한 학술지 『思想』 1934년 5월호에도 ‘일본정신’ 특집이 실릴 정도로 이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은 높았다. 1933년 이토 치신조(伊藤千真三)의 주도로 일본정신 운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일본문화연구회’가 창립되었고, 이 연구회는 총 10권으로 된 『日本精神研究』을 간행했다. 이외에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 및 학자들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정신론을 발표했고, 경성제국대학 장서에 다수의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다(大川周明 1930; 和辻哲朗 1935; 伊藤千真三 1937 등). 이후 육군성 신문반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선전 책자를 발행하였고(陸軍省新聞班 1934), 문부성에

---

기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비평가였던 도사가 준(戸坂潤)은 사상통계가 사상선도, 국민정신작흥, 국체명징운동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고, 고노에 내각 이후의 사상·문화·언론 동원에서 나타난 반국권적(半國權的)·반관반민적(半官半民的) 양상이 일본 특유의 파시즘, 혹은 일본형 문화파시즘의 궤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상·문화동원은 시민적(자발성의) 색채가 매우 엷고, 일본 국민은 관현에 쉽게 허리를 굽히는 에티켓 내지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관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지는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했다(戸坂潤 1967[1937]).

서 1937년 『国体の本義』를 발간함으로써 일본정신론은 관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文部省 1937).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에서 천명된 일본정신의 앙양(昂揚)은 사상동원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계획주무청이었던 문부성은 일본제학진흥위원회와 교학국의 두 조직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사상동원과 학문동원을 수행하였으며, 일본정신과 국체는 두 조직의 사업을 통괄하는 키워드였다. 일본제학진흥위원회는 교육학, 철학, 국어국문학, 역사학, 경제학, 예술학, 법학, 자연과학, 지리학의 9개 학문 분야의 전국학회를 조직하여 주기적인 학술회의 및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었고, 1936~45년 동안 총 47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교학국은 사상 동원과 통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출판·배포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정신총서(日本精神叢書)』는 1935년 8월부터 1943년 9월까지 총 66권이 발간된 대표적 간행물이다. 권당 2,500부가 발행되었고, 지방관청, 관공사립대학, 고등전문학교, 사법학교, 도부현시립도서관 등에 배포되었다.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이었는데, 외곽단체인 일본문화협회(日本文化協會)가 시중 판매를 위해 동일 서적을 출판하기도 했고, 내각인쇄국이 시판을 위해 문고판을 발행하기도 했다(駒込武·河村肇·奈須恵子 2011: 65-112). 경성제국대학 장서에는 40권이 소장되어 있고, 신도, 불교, 신화, 고전문학, 동양철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일본정신론을 접할 수 있다. 이외에 『국체의 본의 해설총서(国体の本義解説叢書)』가 있었는데, 1937년 사상국에서 제작한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의 후속 간행물로서 1937년 12월부터 1942년까지 총 13권이 발간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장서에는 10권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정신총서』에 비해 현대적인 주제의 일본정신론 및 일본문화론을 다루고 있다.

일본정신론이 지성계와 대중사회를 가릴 것 없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졌고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배경에서 창출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동원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논의되어온 일본인론, 일본문화론 중에는 총동원체제에서 정



신동원의 논리에 의해 생성되거나 ‘세탁된’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동원의 논리를 가려내는 작업이 인류학의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원된 일본정신론·일본문화론의 한 예시로서 무사도(武士道, bushido)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전개한다. 무사도는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각종 문헌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용어이고, 전장과 전쟁의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행위논리로서 끊임없이 재해석·재구성되었던 양상을 볼 수 있다. 상기한 『日本精神講座』에서는 일본정신을 논의하기 위해 황도, 신도,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 신무천황, 신공황후, 성덕태자, 선(禪), 심학, 국문학, 화가(和歌), 우생학, 국학운동, 해외진출(이민·식민), 소년단운동, 기미가요(君が代), 일장기, 일본도(日本刀), 몽고침략과 가미가제(神風), 러일전쟁, 노기(乃木) 대장,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등 수많은 주제들이 등장했는데, 제1권 첫 논문의 주제는 무사도였다.

근세 사무라이의 행동윤리와 가치체계를 개념화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무사도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의 칼』에서 직분의식, 은(恩), 의무, 의리, 인정, 명예, 수치, 충효, 존황사상, 자기수양과 같은 일본문화의 유형을 도출하는 데 폭넓게 참조된 바 있다(루스 베네딕트 2002). 이후 이 저서는 무사도가 일본문화의 정수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통념을 지속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베네딕트와 『국화의 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문화론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이 연구에 대한 심각한 비판도 존재해 왔다(小沢万記 1995; Lummis 2007 등).

베네딕트가 1943년 6월경부터 당시 미국 전쟁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에서 일했고, 『국화의 칼』이 1945년 7월경 군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베네딕트가 이 보고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기괴하고 잔혹하고 유치하게만 묘사되던 일본인의 이미지를 교정하는 것이었다(ポーリン ケント 2008). 베네딕트는 서구 문화의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의 독특한 정신세계와 행동패턴이 미국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의 상대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인류학의 설명 논리를 사용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쟁의 상황에서 진행된 적국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었고, 일제의 사상동원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다. 베네딕트가 일본문화의 패턴으로 추출한 존황정신과 무사적 행동윤리(국화와 칼로 은유된)는 1930년대 이후 일제 당국 및 관변 지성계가 정신동원의 논리로서 중점적으로 재구성한 황도(皇道)와 무사도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리고 베네딕트가 참조했다고 하는 자료들, 즉 일본에서 발신된 매일의 라디오방송, 신문기사, 각종 정보, 문헌서, 역사서, 여행기, 영화, 일본군 포로의 심문 기록, 일기, 일지, 재미일본인의 인터뷰 등은 대부분 일제의 사상·학문·문화·언론동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었다.

무사도가 일본정신과 일본문화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 일본인 최초로 국제연맹 차장을 역임한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는 1899년 *Bushido: The Soul of Japan*이라는 영문 저서에서 무사도를 유럽의 기사도(chivalry)와 비교하면서 서구 독자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문헌에 나타난 무사도는 『국화의 칼』에서도 서술된 내용이 많지만, 서구 문화와의 유사성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재구성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봉건제 타파 이후 유럽에서는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 살아남았듯이 무사도는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명치유신 이후에도 미성숙된 시민성과 자본주의(물질주의) 정신을 대체하는 국가 지배층과 국민의 도덕 및 윤리체계로서 지속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서구인에게 기괴한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 무사의 할복과 자살은 유럽 문학작품에서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견주어 설명되고 있다 (Nitobe 1905[1899]; 新渡戸稲造 1969[1938]).<sup>23)</sup>

23) 니토베의 명성과 이 책의 인기는 사무라이 신분이 사라진 시대에 사무라이의 윤리·도덕인 무사도를 일본의 국민문화 내지 국민도덕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무사도(bushido)는 서양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무사도에 대해서는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역사학 분야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니토베가 서양을 향해 미화해서 그려낸 무사도는 근세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허구 내지 개인적 창작이었다. 근세까지 무사도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으며, 실령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무라이의 무용과 위엄뿐만 아니라 비도덕성, 폭력성, 배신, 모략, 하극상을 표현하는 부정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었다. 에도시대 사무라이 계급의 도덕 및 사상으로는 유학(儒學) 계통의 사도(士道)가 무사도보다 훨씬 빈번히 사용되었다(佐伯真— 2004). 그러나 최근에는 근세 사료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

명치시대 이후 무사도는 전쟁의 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군인 정신과 국민 도덕으로 각색 또는 창안된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니토베의 창안과는 또 다른 전통으로 명치초기 구화주의(歐化主義)에 대한 반발과 존황양이(尊皇攘夷)의 국가주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무사도가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제 군벌과 지도층은 병기의 열세를 극복한 자국 군대의 전투력에 큰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무사도 정신을 승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민족정신의 장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헌이 1905년 이노우에 테쓰지로가 편찬한 『武士道叢書』(井上哲次郎·有馬祐政 1905)이다. 3권으로 된 이 서적은 서두에 1882년 1월 4일 공포된 「군인칙유(軍人勅諭)」가 게재되어 있고, 60여 편의 고문헌들을 편집한 것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구축된 경성제국대학 장서에서 무사도(武士道)는 국민도덕(분류기호: 1140) 아래의 하위분류 용어(1143)로 자리 잡고 있다. 무사도의 분류범주에는 25건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는데, 3건을 제외한 22건이 1933~44년에 발간되었다. 아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사상이나 『하카쿠레(葉隠れ)』의 정신과 같이 과거의 사료 속에서 무사도 정신의 정수를 찾고자 하는 문헌들이 많고, 전쟁 말기로 갈수록 존황과 충의의 현세적 정신을 넘어 사생관, 죽음의 미학과 마음가짐, 선적(禪的) 수양 등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42~43년에는 『武士道叢書』을 12권으로 증보한 『武士道全書』가 발간되었다(佐伯有義·植木直一郎·井野邊茂雄 1942~3). 이노우에 테쓰지로는 서문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찬양받고 있는 무사도 정신의 함양을 위해 기사도와 엄연히 구별되고 신무천황 이래 『古事記』, 『日本書紀』, 『万葉集』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대(神代)에 원류를 둔 무사도를 국체의 연원과 관련시켜 연구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군사 분야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무사도가 무예와 검(劍), 무도(武道)와

---

해 무사도가 전투자의 정신뿐만 아니라 에도시대 200여 년의 태평성대 동안 통치자의 도덕 및 사상으로 정립되어 서민사회에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시되기도 했다(笠谷和比古 2014).

무학(武學), 1930년대 중반 이후 발간된 전사(戰史)·전기(戰記), 그리고 충후 미담 등의 문헌에서(荒木樂山 1926; 本郷房太郎 1930 등)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치시대 이후 군벌정치가 패전 때까지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무사도는 일제 사회 지배층 문화의 일부였고, 군대의 규율이나 전투 규범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군사 분야의 문헌들은 충동원체제를 준비·운영한 일제 군인들이 군비강화의 계획을 짜고,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신병기를 다루고, 신전술을 수행하는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급군인들의 무사도는 니토베나 베네딕트가 묘사한 봉건제의 유산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사도의 정신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은 전장과 충후에서 무사도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만들어냈고, 무사도가 전쟁에 직면한 사회 전반에 폭넓게 스며들게 하였다. 명치시대에 창안되었던 무사도는 일본 고유의 정신문화로 재구성·선전되었으며, 전쟁의 정신으로서 평시의 합리성으로부터 일탈되어 갔다. 일제 군부가 발행한 자료에서 정신력, 반물질주의, 신무, 황군(皇軍)의식 등이 강조되는 것은 충동원체제가 구축되는 1930년대 후반이며, 전황이 불리해 질수록 황도주의의 충성에는 신무(神武)와 같은 종교적 색채가 강해진다. 그리고 동원의 논리로 재구성된 무사도와 일본정신은 상급군인의 것이었다기보다 급박한 전황 속에서 전장으로 동원된 하급병사나 학도병에게 선전되고 주입된 것이다.

일본군 포로와 전사 자료를 이용한 베네딕트의 일본문화론은 정신동원의 과정에서 재구성된 무사도와 황도주의를 승전국의 관점에서 뒤집어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화의 칼』의 내용은 1930년대 이후 발간된 일제 무사도 서적들의 합창과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1950년 『民族學研究』에 이 책을 논평해야 했던 패전국 일본 지식인들은 이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을 것이고, 패배한 전쟁의 문화를 일본 문화로 논해야 하는 착잡함이 있었을 것이다(小沢万記 1995). 지금도 일본의 무사도 연구에서 1930~40년대 무사도 인기는 ‘거품’으로 표현되고, 100

년도 넘은 니토베의 무사도가 논의의 대상으로 빈번히 소급되는 것은 무사도가 일본인들이 잊고 싶어하는 전쟁의 역사와 기억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전쟁과 군사문제가 사회체제, 문화, 학문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총동원체제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세분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단순화시킨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체제의 구조와 전체성을 펼쳐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제시된 여러 논의들은 그동안 따로따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군사론가들은 전쟁론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전쟁사가들은 전쟁들과 군사문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내셔널리즘 연구자, 정치·사회사상자 연구자, 사회조직과 문화 연구자, 종교와 심성 연구자는 전쟁이라는 현상 내지 변수에 부분적 관심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력전과 총동원체제는 영어로 “total”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듯이 그것의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전쟁과 (평시에는) 군사문제를 선행변수로 놓고 사회체제와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총력전과 총동원체제는 적합한 연구주제이며, 역사적 중요성도 크다.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일제의 총동원체제 구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혹은 명치시대 이후 진행된 사회적 변화와 연속선상에서 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질적·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부분도 많이 있다. 무엇보다 사회 및 국가의 집단적 경험으로서 동원의 경험은 비가역적인 것이다.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건, 징병·징용을 하건, 직능별·지역별·연령별·성별 조직을 재구성하건, 일본정신을 재정립하건 최초에 동원이 일어나는 과정은 유동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동원이 완수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은 쉽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제도, 관행, 규율은 어떤 주체가 의도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일본과 식민지의 전후사에 남긴 유산은 크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진행되어 왔고(山之内靖 1995; 石津朋之 2012 등), 두 번의 세계대전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일제 지도층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총력전 양상을 학습하고 모방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사에서는 제3세계 각국으로 총력전과 총동원체제가 모방·이식되는 과정이 있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당시 국제정치에서 성원권을 가졌던 서구제국들과 일본제국의 제국주의 전쟁이었고, 식민지 인민들도 그 전쟁에 동원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수백만 명의 군인을 식민지로부터 총원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제국에 속해 있던 식민지 조선 인민의 징용, 강제동원, 강제연행이 있었다. 문제는 전후 식민지 인민들이 신생 독립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치렀던 ‘주인이 된 전쟁’이며, 한국전쟁과 같이 미소냉전 속에서 제3세계 인민들이 실천했던 내전(civil war)과 전쟁 내셔널리즘은 각국의 전후체제를 만들어내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 제3세계 각국의 내전, 즉 시민전쟁은 해방 조선의 국방전략이 일제의 총력전 지침서를 거의 복제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金弘一 1949) 많은 경우 총력전·총동원체제의 전쟁양식을 답습한 것이었다.

총력전·총동원체제 연구의 중요성은 전후에 등장한 권력이 그 유산을 해체한 경우가 많지 않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것을 부활시키려 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필자는 미군정 연구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전후 문화에 총동원체제의 유산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후 일본과 한국에 건설된 미군기지의 상당수는 총동원 시대 일본군기지를 전용한 것이고, 현대 한국의 아파트단지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제적 토지수용은 일제 국가총동원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만들기의 역사적 지평 위에서 징병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볼

수도 있고,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각종 국민조직과 민족정신 창안의 맥락 및 연원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도 유용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군사 독재와 경제개발, 그리고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총력전 체제의 연속성이나 모방적 요소를 지적하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16년 6월 10일, 논문심사일: 2016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0일

## 참고문헌

金弘一

1949 『国防概論』, 高麗書籍株式會社.

나카노 토시오

2001 『오쓰카 히사오와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전후 민주주의 사상』, 서민교·정애영 역, 서울: 삼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편)

2013 『강제동원명부해제집 2』, 동위원회.

미나미 히로시

1999 『일본인론(上): 메이지로부터 오늘까지』, 서울: 소화.

루스 베네딕트

2002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김윤식·오인석 역, 서울: 을유문화사.

안재익

2013 “1920년대 일본 총동원론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시재

2001 “초나िका이란 무엇인가,” 이시재 외 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20.

이종구

2010 “총력전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 『일본비평』 2: 88-131.

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피해에관한진상규명위원회(편)

2009 『강제동원명부해제집 1』, 동위원회.

정혜경

2004 “국내 강제연행 연구, 미래를 위한 제언,” 『한일민족문제연구』 제7권, pp. 47-82.

2013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서울: 도서출판 선인.

정혜경 · 심재욱 · 오일환 · 김명환 · 北原道子 · 김난영

2011 『강제동원을 말한다 - 명부편(1) 이름만 남은 절규』, 서울: 선인.

정혜경 · 김명환 · 今泉裕美子 · 방일권 · 심재욱 · 조건

2012 『강제동원을 말한다 - 명부편(2) 제국의 끝자락까지』, 서울: 선인.

진필수

2014 “폭력의 체계와 인적 동원: 군사,” 진필수 · 전경수 · 오창현 · 김순주 · 문혜진 · 김광식, 『부속도서관 장서 분석을 통한 경성제국대학 학지의 연구 - 식민지에서 점령지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용역보고서, pp. 173-185.

2015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 구성에 대한 일고찰 - ‘식민’ 항목의 경우,” 『사회와 역사』 105: 147-2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83 『국민정신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加藤陽子

2005a “總力戰下の政軍關係,” 倉沢愛子ほか(編)『戦争の政治学』, 岩波書店.

2005b 『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吉川弘文館.

加田哲二

1943 『戦争本質論』, 慶応書房.

景山鹿造

1937 『国民精神總動員教程』, 日本青年教育会.

纈纈厚

2010[1981] 『總力戦体制研究: 日本陸軍の国家總動員構想』, 社会評論社.

駒込武 · 河村肇 · 奈須恵子(編)

2011 『戦時下学問の統制と動員: 日本諸学振興委員会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464 『비교문화연구』 제22집 2호(2016)



菊池春雄

1942 『戦争と建設』, 新東亜協会.

国民精神文化研究所(編)

1933 『国民精神文化研究所所報』, 第1-3号.

1939 『国民精神文化研究所要覧』. 国民精神文化研究所.

今中次麿

1941 “国防国家の概念・政策・構造 - 非常的政治原理としての国防国家,” 『法政研究』 11(2): 87-136.

吉見義明

1987 『草の根のファシズム: 日本民族の戦争体験』, 東京大学出版会.

吉田裕

1984 “『国防国家』の構築と日中戦争,” 『一橋論争』 92(1): 37-54.

唐島基智三

1938 『国家総動員法解説』, 清教社.

大室政石

1994 “国民精神総動員運動の回想,” 『国民精神総動員中央連盟機関紙 国民精神総動員 第2巻』, 緑蔭書店.

大政翼賛会宣伝部(編)

1941 『第一回中央協力会議議事録』, 商工行政社.

大川周明

1930 『日本的言行』, 文録.

大串潤児

2005 “大政翼賛の思想と行動,” 吉田裕(編). 『戦争の政治学』, 岩波書店, pp. 207-234.

大串隆吉

1996 “戦時体制下日本青年団の国際連携: ヒトラー・ユーゲントと朝鮮連合青年団の間,” 『人文学報 教育学』 31: 153-175.

東亜研究所

1944 『米国の総動員機構』, 帝国出版株式会社.

笠谷和比古

2014 『武士道: 侍社会の文化と倫理』, 文唱堂.

瀬尾芳夫(編)

1939 『日本精神発揚講演集』, 国民精神総動員中央聯盟.

柳澤治

- 2003 “日本における『経済新体制』問題とナチス経済思想 - 公益優先原則・指導者原理・民營自主原則,” 『政経論叢』 72(1): 45-123.

文部省

- 1937 『国体の本義』, 文部省.

朴慶植

-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防衛省防衛研究所

- 2012 『総力戦としての太平洋戦争』, 平成23年度戦争史研究国際フォーラム報告書.

白根孝之

- 1942 『軍隊・戦争・国民組織』, 青山出版社.

本郷房太郎

- 1930 『精神立国と武徳の鍛錬』, 大日本武徳会本部.

ブクシュ バン

- 1937 『列強の戦時経済政策: 世界大戦時の歴史的=体系的な研究』, 白谷忠三(訳), 育生社.

桑野弘隆

- 2014 “総力戦体制から国民的総動員システムへ,” 『専修大学社会科学年報』 48: 213-231.

寺田弥吉

- 1942 『日本総力戦の研究 上巻』, 日本電報通信社出版部.

山室信一

- 2011 『複合戦争と総力戦の断層: 日本にとっての第一次世界大戦』, 人文書院.

山田修士

- 2015 “大政翼賛体制と内務省 - 内務省の機構系統を基軸として,” 拓殖大学政治行政修士学位論文.

山之内靖

- 1995 “方法的序論 - 総力戦とシステム総合,” 山之内靖・ヴィクタ-コシュマン・成田龍一(編), 『総力戦と現代化』, 柏書房, pp. 9-53.

石津朋之

- 2012 “総力戦と社会の変化 - アーサー・マーウィックの戦争観を中心に,” 防衛省防衛研究所(編), 『総力戦としての太平洋戦争』, 衛省防衛研究所, pp. 43-74.

小林英夫

2004 『帝国日本と総力戦体制』, 有志舎.

小松東三郎(編)

1940 『国民精神総動員運動』, 国民精神総動員本部.

小野清秀

1937 『国家総動員』, 国風会.

小沢万記

1995 “日本文化論の出発点 - 『民族学研究』(1950年5月号)の『菊と刀』特集を読む,”  
『高知大学学術研究報告』44: 183-194.

新渡戸稲造

1969[1938] “武士道,” 『新渡戸稲造全集 第一巻』, 矢内原忠雄(訳), 教文館, pp.  
5-146.

新獨逸國家大系刊行會

1939~41 『新獨逸國家大系 第1~12巻』, 日本評論社.

歴史教育研究会(編)

1938 『戦争と文化』, 四海書房.

陸軍省新聞班

1934 『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陸軍省新聞班.

伊藤千真三

1937 『日本国体論』, 출판사 미상.

伊藤安二

1944 『日米学徒決戦論』, 越後屋書房.

二荒芳徳

1938 『獨逸は起ちあがつた』, 実業之日本社.

二荒芳徳・大日方勝

1938 『ヒットラ-と青年』, 成美堂.

資源局

1929 『米国戦時食糧政策』, 資源局.

1930 『仏国国家総動員法案』, 資源局.

長谷川正

1938 『対立せる戦争論』, 教材社.

長友安隆

- 2001 『戦時下神道界の様相 - 従軍神職と英霊公葬運動を中心として』、『明治聖徳記念学会紀要』34(2): 55-88.

ジャン・ヴィレムホーニツヒ

- 2012 “総力戦とは何か - クラウゼヴィッツからルーデンドルフへ,” 防衛省防衛研究所(編), 『総力戦としての太平洋戦争』, 防衛省防衛研究所, pp. 29-42.

赤木須留喜

- 1984 『近衛新体制と大政翼賛会』, 岩波書店.

井上哲次郎・有馬祐政(編)

- 1905 『武士道叢書』, 博文館.

朝比奈策太郎

- 1939 『独逸の青少年教育について』, 『有終』26(2): 2-23.

朝日新聞社(編)

- 1938 『総動員法の全貌』, 朝日新聞社.

朝日新聞政治経制部(編)

- 1941 『総動員態勢の前進: 改正総動員法の全貌』, 朝日新聞社.

佐伯有義・植木直一郎・井野邊茂雄(編)

- 1942~3 『武士道全書 第1-12巻』, 時代社.

佐伯真一

- 2004 『戦場の精神史: 武士道という幻影』, 日本放送出版協会.

カル・ヘルフェリヒ

- 1940 『ドイツの戦時財政と戦時経済』, 安井源雄(訳), 朝鮮軍事後援聯盟.

クーク, G.F.

- 1937 “ナチス独逸の終始一貫せる国民教育,” 『有終』, 24(6): 61-67.

土屋喬雄

- 1943 『国家総力戦論』, ダイヤモンド社.

ヘルムト・シュテルレヒト

- 1940 『若きドイツは鍛へる: ドイツ青少年の国防教育』, 日本青年外交協会研究部(訳), 日本青年外交協会出版部.

戸坂潤

- 1966[1937] “日本イデオロギー論,” 『戸坂潤全集 第二巻』, 勁草書房, pp. 223-438.  
1967[1937] “思想動員論,” 『戸坂潤全集 第五巻』, 勁草書房, pp. 188-195.

トビン, H. J.・ ビッドウェル, P. W.

1941 『アメリカ総動員計劃』, 原田禎正(訳), 生活社.

ポーリン ケント

2008 “ルース・ベネディクトによる文化理解と紛争解決の関係,” 『シンポジウム報告書 よみがえるルース・ベネディクト - 紛争解決・文化・日中関係』, 竜谷大学アフラシア平和開発研究センター, pp. 29-34.

ビ-ターソン, H.C.

1940 『戦時謀略宣伝』, 村上倬一(訳), 富士書店.

和辻哲朗

1935 『風土: 人間学的考察』, 岩波書店.

荒木樂山

1926 『武道大鑑』, 朝鮮奨武会.

フラ-, 渋川貞樹・救仁郷繁 訳編

1940 『全体主義戦争論: 伊・エ戦争の分析と将来戦』, 高山書院.

Barnhart, Michael A.

1987 *Japan Prepares for Total Wars: The Search for Economic Security, 1919-194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Freytag-Loringhoven, Baron von

1918 *A Nation Trained in Arms or a Militia?: Lessons in War from the Past and the Present*, London: Constable & company Ltd.

Boemeke, Manfred F., Roger Chickering, and Stig Förster(eds.)

1999 *Anticipating Total War: The German and American Experiences, 1871-1914*,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ickering, Roger

2003 “Sore Loser: Ludendorff’s Total War,” in Roger Chickering and Stig Förster, eds., *The Shadows of Total War: Europe,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1919-1939*,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1-178.

Chickering, Roger and Stig Förster(eds.)

2000 *Great War, Total War: Combat and Mobilization on the Western Front, 1914-1918*,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The Shadows of Total War: Europe,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 1919-1939,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ckering, Roger, Stig Förster, and Bernd Greiner(eds.)  
 2005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5*,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0 *War in an Age of Revolution 1775-18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irchild, Byron and Jonathan Grossman  
 1959 *The Army and Industrial Manpowe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 Förster, Stig and Jörg Nagler(eds.)  
 1997 *On the Road to Total War: The American Civil War and the German Wars of Unification, 1861-1871*,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on, Sheldon  
 1997 *Molding Japanese Minds: The State in Everyday Lif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ffin, Robert A.(ed.)  
 1942 *School of the Citizen Soldier: Adapted from the Educational Program of the Second Army*, Appleton-Century Company.
- Lummis, Douglas  
 2007 "Ruth Benedict's Obituary for Japanese Culture," *The Asia-Pacific Journal* 5(7). <http://apjif.org/-C.-Douglas-Lummis/2474/article.html>.
- Malinowski, Bronislaw  
 1941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Wa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6(4): 521-550.
- Marwick, Arthur, Clive Emsley, and Wendy Simpson(eds.)  
 2001 *Total War and Historical Change: Europe 1914-1955*,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ed.)  
 2003 *Germany and the Second World War I-X*, translated by P. S. Falla, Dean S. McMurry, and Ewald Os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oran, Daniel and Arthur Waldron(eds.)

2003 *The People in Arms: Military Myth and National Mobilization since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tobe, Inazo

1905[1899] *Bushido: The Soul of Japan*, The Student Company.

Nixon, Larry(ed.)

1939 *What Will Happen and What to Do When War Comes*, New York: The Greystone Press

Slosson, Preston

1942 *Why We Are at War*, Boston: Houghton Mifflin Co.

Smith, R. Elberton

1959 *The Army and Economic Mobilization*,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Key concepts〉: total war, general mobilization system, anthropology of war, Japanese spirits, Bushido

## A Review of Imperial Japan's General Mobilization System for the Anthropology of War

Jin, Pilsu\*

This article discusses what kinds of perspectives and topics anthropological research about the war in Korea can adopt, reconsidering the origin and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mobilization system constructed by the Japanese empire after 1930s. Imperial Japan's general mobilization system was a social system for war which the military and government authorities constructed, comparing with the western model after analyzing the patterns of total war that emerged from the First World War. The authorities started the reorganization of 'home front' and ideological manipulation at an earlier stage, in order to overcome the inferiority for material resources and economic power, and supplement the immature patriotism(devoid of civil consciousness). How the functional or local organizations were organized and managed by government-sponsored movements could be a good measure in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version of totalitarianism. More detaile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as to how local

---

\*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 such as Buraku-kai were transformed and mobilized in wartime. In the respect of ideological manipulation, a unique statism such as the ideology of ‘Imperial Way’, ‘Kokutairon (國體論)’, ‘Japanese spirits’ were circulated widely. Careful reconsideration is needed about invented or adapted culture in the context of war such as Bushido. In the formation of social system, culture, academic discipline, the experience of military mobilization is irreversible. Looking into the cultural legacy of military mobilization in various postwar histories through concepts such as emulation, transplant, continuity, distortion, revival can be a kind of work for the anthropology of war.

